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91 |
|----------|----|

제출연월일 : 2007. 1. 12.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인투자유치를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우수기업유치를 위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원하는 시설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특별지원할 수 있는 대상 및 범위를 정함(안 제6조).
- 다.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7조).
- 라.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안 제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입지지원 :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후 2007년 추경에 편성
※ 국비 75%, 시비 25%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실 및 기업지원과와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6. 10. 13 ~ 11. 2 / 접수 의견 없음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전광역시의 외국인투자유치를 촉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지원)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제3조(고용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4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 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간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고용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시민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후 5년간 시 관할 구역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시민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 50만원 이하로 6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교육훈련보조금은 기업당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시설보조금 지원) ①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 및 연구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보조금은 신설 또는 증설하는 시설비가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5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 동의의를 얻어 특별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영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원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①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호의5에 규정
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2.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

②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
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 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용도로 지원받았을 경우 중복 지원할 수 없다.

④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규모 등은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회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외국인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비 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 또는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및 약국 등 서비스 지원시설을 건립하는 경우

4.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영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 또는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외국인투자유치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⑦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위촉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전문가(외국인을 포함한다)를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대규모 투자사업 등 투자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투자유치 전문회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시장은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및 전문회사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자문료 및 투자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치구의 외국인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등) ①시장은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등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지원기준」 규정에 따라 보조금에 대한 취소 및 반환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 등) ①시장은 외국인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현저히 크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대전광역시외국인투자유치자문위원,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외국인투자유치 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특별승진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병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지급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포상금 지급 기준(제14조제2항 관련)

| 지급대상 | 외자유치금액 (US \$ 기준) | 지급기준 | 지 급 산 식 | 비 고 |
|--|----------------------|--------|---------------------------------------|--|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자 유치자문위원, 개인, 기업, 단체 | 1천만불 미만 | 0.05% | | ※ 대전광역시 외국인투 자 유치 협 의 회의 심의를 통해 지급기 준의 범위안 에서 지급 |
| | 1천만불 이상 5천만불 미만 | 0.04% | $5천불 + (유치금액 - 1천만불) \times 0.0004$ | |
| | 5천만불 이상 1억불 미만 | 0.03% | $2만1천불 + (유치금액 - 5천만불) \times 0.0003$ | |
| | 1억불 이상 | 0.02% | $3만6천불 + (유치금액 - 1억불) \times 0.0002$ | |
| 공무원 | 1억불 이상 | 0.005% | | |

관 련 법 규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국·공유재산 등의 임대 및 매각) ① 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장,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지방직영기업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기업"이라 한다)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등의 관련규정에 불구하고 수익계약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이 조 및 제14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 및 정부투자

기관관리기본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삭제 <2004.12.31>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4.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7조의2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⑦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⑨제6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안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내로 할 수 있다.

⑩제2항 및 제9항의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2항 및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 및 분양가액 인하(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에게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거나 조성원가이하로 분양할 수 있도록 그 감면분 또는 분양가액과 조성원가의 차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교육훈련보조금등 각종 보조금의 지급 기타 외국인투자유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 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정한다. 이 경우 자금지원기준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과 실적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③국가는 매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등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현금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의 고도기술수반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이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예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를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하 이 호에서 "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일 것

- 나. 사업과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20인 이상일 것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금액은 그 외국인과의 협상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지원을 하는 경우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외에 현금지원의 결정, 현금지원한도의 산정방법 및 외국인과의 투자지원협상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3 (외국인투자유치 포상금)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정부투자기관의 장은 외국인투자의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유치실적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8조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지역을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지방산업단지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 ②2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제1항 전단에 의하여 동항 제2호의 지역을 시·

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사항(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④산업단지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외의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도지사가 이를 개발·관리한다.

⑤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⑥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이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은 이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시로 본다.

⑦외국인투자지역을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함에 있어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중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동법 제22조제2항중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⑧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국·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임대료는 당해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1호의 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당해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당해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 토지 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②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1.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 :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③법 제13조제6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통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제조업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동항제2

호의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④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및 동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율

가. 제3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나. 제3항제1호 다목 및 동항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2. 법 제13조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 : 당해 토지 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⑤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다.

⑥법 제13조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당해 국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

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⑨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등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기준 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고용창출 및 기술이전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효과와 입주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금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④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신규고용창출 규모에 따라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을 말한다.

제20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①법 제1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②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품·소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품·소재(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속하는 것에 한한다)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최종생산물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
2. 첨단기술 또는 핵심고도기술을 수반하는 부품·소재로서 기술과급효과

또는 부가가치창출효과가 큰 것

3. 산업의 기반이 되거나 산업간 연관효과가 큰 것

제23조(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①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2.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도 소속공무원중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시·도지사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
2. 관할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관할 특별지방행정기관 또는 법 별표 1 및 법 별표 2에 규정된 민원사무의 처리에 관련되는 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당해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무역관·지사 및 사무소의 장 중에서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지원센터의 장이 지정하는 자
4. 외국인투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지정 또는 위촉함에 있어서는 협의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당해 위원과 당해 위원과 관련되는 안건이 부의된 회의에 한하여 참석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분하여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④협의회의 회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 목적
3.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4.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5. 사업시행자 및 관리기관
6. 사업시행방법
7.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②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1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 및 지정목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3. 입주기업의 자격 및 주요 유치업종
4. 관련 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③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한민국국민(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소유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를 외국인투자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삭제 <2004.1.13>

2의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및 수상관광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휴양
업 및 동항제5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원시설업
다. 국제회의산업육성예안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
시설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가. 화물유통촉진법 제2조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를 조
성하여 운영하는 사업

다. 항만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항만배후단지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
한법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라. 항공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항구역내에서 영위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

마.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민
간투자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귀속시설에 한한다)을 조성하는 사업

④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모든 사항을 말한다.

1. 2인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의 합계액이 미화 3천만 달러
이상일 것

2. 영위하는 업종 또는 사업이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업종 또는 사
업에 해당할 것

3.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
방산업단지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할 것

⑤시·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동항제2호의 지역을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
정계획(당해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개발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
된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지방산업단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2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3.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내역·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4.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5.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기대효과
6. 재원조달계획
7.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8. 개발사업의 시행자
9.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10.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11.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12. 환경성 검토에 관련된 자료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료
13.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⑥시·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시장·군수·구청장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⑦위원회는 지정계획을 기초로 당해 유치대상 외국인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⑧시·도지사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지 못한다.

⑨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8조제3항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계획에 따라 제3항 및 제4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⑩시·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지정계획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개발하여야 하며, 그 지정계획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⑪제1항 내지 제10항외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인세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5.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6.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
- 2의7.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3. 기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

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상당액(총산출세액에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이 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에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1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당해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이 감소한 때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③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투자가(이하 이 장에서 "외국투자가"라 한다)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세액의 전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④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있어서는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동안은 당해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⑤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전에 제1항 각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지방자

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감면
2.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다만,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제2호의4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⑥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잔여기간에 한하여 적용된다.

⑦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기 전에 그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주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감면·감면내용변경·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 제5항, 제12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사목 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⑩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신청기한이 경과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신청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후의 잔존감면기간에 한하여 제1항 내지 제5항 및 제1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액은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⑪대한민국국민(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지국의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권에 갈음하는 체류허가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 또는 대한민국법인(이하 이 항에서 "대한민국국민등"이라 한다)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이 조 내지 제1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에 대한 대한민국국민등의 주식소유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⑫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간·공제기간 및 감면비율·공제비율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기간 또는 공제기간을 10년까지 연장하거나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 또는 공제비율을 높인 때에는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 및 비율에 의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감면하되,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외국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 등에서 생기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각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그 기업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비율에 따라 감면하되,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는 동안에 있어서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3. 외국인투자기업이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 가.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있어서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 나.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이 있는 경우의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는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각각 공제한다.

⑬외국인투자신고 후 최초의 조세감면결정통지일부터 3년이 경과하는 날까지 최초의 출자(증자를 포함한다)가 없는 경우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결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②산업단지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승인을 얻은 후 2년 이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실시계획에 정하여진 기간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당해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